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문서번호 : 2026-

시행일자 : 2026. 4. 1.

수 신 : 제주특별도지사

참 조 : 비서실장, 관련 부서장

제 목 : 현충시설 관련 시정요구 및 면담 요청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제주4·3사건의 역사 인식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연구·검토하고, 공공 영역에서의 균형 있는 역사 인식과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기준 확립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3. 본 단체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시설에서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조치와 관련하여, 행정의 중립성 및 공정성, 그리고 공공 역사 서술의 적정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 박진경 제11연대장 추모비 인근 안내판 설치 문제

- 특정 역사 해석을 전제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박진경 제11연대장에 대한 평가가 일방적으로 형성될 우려가 있음

나. 함병선 제2연대장 공적비의 제주4·3평화공원 이설 문제

- 공적비의 설치 취지 및 기존 평가와의 관계에서 이설의 취지와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본 사안과 관련하여 두 분의 연대장 유족이 본 단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관련 경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와 같은 조치는 역사적 평가에 있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의 특정 해석을 사실상 반영하거나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이 유지하여야 할 중립성 및 균형성 원칙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5. 특히, 현충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기념 공간에 대한 서술 및 배치는 관련 인물의 명예 및 사회적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은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와 관련하여 유족 측에 대한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조치를 넘어 관련 당사자의 권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절차적 보장이 결여된 점에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5. 이에 본 단체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 입장 및 조치 경위를 확인

하고, 필요한 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면담 요청 사항>

- 가. 안내판 설치 및 공적비 이설의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 나. 관련 조치에 있어 유족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진행 여부
- 다. 관련 조치에 있어 전문가 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 진행 여부
- 라. 해당 시설의 역사적 서술 기준 및 운영 원칙에 대한 설명
- 마. 안내판 내용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재검토 여부
- 바. 공적비 이설 조치의 타당성 및 원상 회복 또는 보완 조치 검토 여부

- 6. 본 단체는 위 사안이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역사 서술과 관련된 기준 및 책임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7. 아울러, 본 사안과 관련된 조치가 두 분 연대장의 명예 및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경위 및 내용에 따라서는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임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 8. 바쁘시겠지만 아래 일정 중 가능한 일시를 지정하여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방문 예정일: 2026. 4. 6. (월) 10:00
- 참석 인원: 전민정 대표 등 5명

- 9. 면담이 어려운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책임자와의 면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10. 본 요청에 대한 회신을 4월 3일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 1. 추도비 안내판에 대한 비판 1부.
2. 제2연대장 함병선 공적비 이설 전후의 사진 1부.
3. 제주의 소리 기사 1부. 끝.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전민정

담당자

시행 4·3시민연대- (2026. 4. 1.) 접수

우 06633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2, 6층 / 공개

전화 (02)737-0403 홈페이지 jeju43.kr 이메일 info@jeju43.kr 팩스 0504-396-7090

[첨부 1]

추도비 안내판에 대한 비판

고 박진경 대령은 미군정 시기인 1948년 4월에 발생한 4·3사건 시 경비대 제11연대장으로 4·3사건 진압 작전을 펼치다가 6월 18일에 남로당 뿌락치이며 부하인 문상길 중위 등 일당 9명에게 암살당했다. 이에 제주도 및 군경원호회가 박진경 대령의 공적을 인정하고 1952년에 추도비를 세웠다.

그런데 2025년 12월 15일에 제주도 연동산 132-1번지 도로변에 있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공동으로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추도비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안내문 내용은 박진경 대령의 공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매장시키려는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내용들이었다.

안내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한다.

바로 세운 진실

박진경과 제주4·3

Park Jin-kyung and Jeju4·3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됐지만, 곧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됐다. 북위 38도선 남쪽을 점령한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까지 3년간 군정을 실시하며 직접 통치했다. 미군정은 친일파를 다시 등용한 데다 누적된 실책으로 민심을 잃었고, 이에 1946년 10월 경상북도 대구를 중심으로 큰 봉기가 일어나 전국적으로 주민과 경찰 200명 가량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에서는 주민들이 잘 참아내 인명피해 사건이 없었다.

그러나 1947년 3월 1일 제주읍 관덕정 앞에서 열린 미군정 규탄 시위 때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6명이 숨지자 큰 혼란이 벌어졌다. 주민과 공무원이 총파업하며 항의하자, 미군정은 느닷없이 “제주도민은 70%가 좌익”이라며 경찰과 서북청년회 등을 동원해 탄압했다. 1년 동안 2,500여 명을 잡아들여 고문했고, 1948년 3월에는 경찰에게 고문받던 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랐다.

이에 1948년 4월 3일, ‘경찰과 서북청년회 등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만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기치로 350명의 무장대가 경찰지서를 습격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김익렬 연대장을 전격 해임하고 박진경 중령을 새 연대장으로 임명했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6일 제주도에 와서 40일 남짓 강경한 진압작전을 벌였고 그 대가로 상관을 앞질러 대령으로 특진했다. 그 무렵 미군 비밀보고서에 “3,000여 명이 체포됐다”고 기록될 정도로 박진경은 무리한 작전을 전개했다. 한 언론은 ‘포로’로 끌려오는 이들이 “12~13세 되는 소년, 60이 넘은 늙은이, 그리고 부녀자”라며 한탄했다. 강경 작전을 펴던 박진경은 결국 6월 18일 부하인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에게 암살됐다.

손선호는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명령”이 암살 동기라면서 “박진경이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했다”고 말했다. 박진경의 작전참모 임부택 대위도 “박진경 연대장이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자는 총살하라고 명령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2003년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아직 제주4·3이 끝나지 않아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던 1952년에 군경원호회 명의로 세워진 ‘박진경 대령 추도비’의 내용은 일부 사실과 맞지 않는다. 또한 여전히 박진경을 미화하여 4·3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안내판을 세운다.

2025년 1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박진경 대령 추도비 및 안내판 사진
 <추도비 안내판에 대한 비판>

1948년 4월 3일, ‘경찰과 서북청년회 등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만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기치로 350명의 무장대가 경찰지서를 습격했다.

위 내용은 4·3이 발발한 동기를 잘못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남한만의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이 잘못된 것처럼 표현하였으며, 경찰지서를 습격한 무장대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1. 4·3사건 발발 동기는 경찰과 서청 등의 탄압이 아니라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지령과 경찰의 남로당원 검거 때문이다. 남로당 중앙당은 1948년 2월 전국에 2·7폭동을 일으키면서 제주도당에게도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키라. 경찰 간부와 고위 관리를 암살하고 경찰 무기를 노획하라. 총선거와 군정을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폭동지령문을 보냈다.(주한미육군 971방첩대 격주간보고서 1948. 2.1~2.15 ; 주한미군사령부 정보보고서 1948. 2. 6.)

경찰은 1948년 1월 22일과 26일 등 2회에 걸쳐 폭동 준비 중인 남로당의 비밀회의장을 급습하여 221명을 검거하고 폭동지령문을 압수하였다. 이에 경찰 검거를 피한 간부 20여 명이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2월 22일의 신춘회의에서 강온파간 격론 끝에 무장투쟁을 결정하였다.(근거 : 정부 4·3보고서 157~160쪽)

4·3사건을 주도한 김달삼은 “당의 조직수호와 방어수단 및 단선 단정 반대 구국투쟁의 방법으로 무장 반격전을 전개하기로 했다”라고 4·3의 동기를 기록했다.(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10쪽, 17쪽)

신춘회의는 경찰에 의한 최초의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인 3월 6일의 김용철군 사건보다 2주정도 앞선 시점이어서 신춘회의 시는 경찰 등의 탄압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 김달삼도 경찰 등의 탄압 문제를 4·3의 동기로는 기록하지 않았다.

2.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따른 단독정부 수립 및 분단의 책임은 미군이나 남한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남·북한 동시 선거안을 거부한 소련과 북한 측에 있다. 1948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회의에 따라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미·소공동위원회가 2년여 동안 개최되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유엔으로 이관되었는데, 남·북한 동시 선거를 통한 유엔의 정부구성안을 소련과 북한이 반대함으로써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5·10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고, 북한도 소련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인 선거 절차를 거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2개 정부로 분단되었다.

따라서 남로당 제주도당은 4·3사건을 일으키면서 ‘남한만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반대 및 저지하려는 남로당의 정치구호이다.

제주4·3을 주도했던 김달삼은 1948년 8월 초에 월북해서 북한의 김일성 정부 탄생에 협조하였고, 1949년에는 김일성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받았으며, 유격대를 이끌고 남파되어 태백산맥-경북 일대에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활동하다가 6·25전쟁 중에 국군에게 사살되었다.

3. 4월 3일 경찰지서를 습격한 무장대의 정체는 남로당제주도당이 양성한 인민유격대와 자위대였다. 남로당제주도당은 2월 22일 신춘회의에서 무장투쟁을 결정한 후 제주도당 간부들을 강성인물로 교체하고 군사부를 신설해서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는데 군사부장은 김달삼(본명 : 이승진)이었다. 군사부장 김달삼이 무장대인 인민유격대와 자위대를 지휘함으로써 4·3을 주도하게 된다.

제주도당은 4·3을 일으키면서 제주도 주둔 경비대 제9연대에서 동조자 200명을 동원(차량 5대 파견)하여 제주읍에 있는 경찰의 중추인 경찰감찰청과 제주경찰서를 공격하고 도내 24개 지서중 14개 지서 습격에는 양성한 인민유격대와 자위대 400명을 배치하였다.(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76쪽)

남로당중앙당은 ‘폭동’을 명령하였는데 제주도당은 경비대 200명을 동원하는 ‘반란’을 계획하였던 것이다.(폭동에 조직된 무장병력이 개입하면 반란이다) 그런데 이날 경비대 동원이 실패함으로써 제주읍의 감찰청과 제주경찰서는 공격을 면하였는데, 경비대 동원 실패원인은 경비대가 창설 중이어서 당시는 탄약이 보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4·3은 말한다 2권, - 부록 김익렬 유고 -297쪽, 305~307쪽) 탄약은 경비대에 출동명령이 하달된 직후인 4월 19일 경에 보급된다.

4월 3일, 인민유격대와 자위대 400명이 14개 경찰지서 중 2개 지서는 습격에 실패하고 12개 지서는 성공하였다.(12개 지서 습격한 무장대 수는 350명임)

지서 습격에 성공한 남로당 무장대는 경찰과 가족 및 우익 인사와 가족들을 살해하고 납치하기도 하였다.

미군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김익렬 연대장을 전격 해임하고 박진경 중령을 새 연대장으로 임명했다.

위 내용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김익렬 연대장이 미워서 미군정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전격 해임한 것처럼 표현하였다.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1948년 5월 5일 제주도 미군정청에서 열린 딘 군정장관이 주재한 4·3사태 진압에 관한 대책회의에서 조병옥 경무부장이 자신과 자신의 부친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적하자 격분한 나머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조병옥 경무부장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여 회의를 망쳐버린 일이 있었다.(4·3은 말한다 2권 부록 - 김익렬 유고 - 341~343쪽)

김익렬이 5월 6일부로 전격 해임된 것은 전날 대책회의에서 딘 군정장관 면전에서 조병옥 경무부장과 떡살잡이를 하여 회의를 무산시킨 행동에 대한 문책이었다. 그래서 후임으로 박진경 중령이 임명된 것이다. 김익렬의 해임은 ‘평화적 해결 노력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군정장관 면전에서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에 대한 문책 조치였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6일 제주도에 와서 40일 남짓 강경한 진압작전을 벌였고 그 대가로 상관을 앞질러 대령으로 특진했다. 그 무렵 미군 비밀보고서에 “3,000여 명이 체포됐다”고 기록될 정도로 박진경은 무리한 작전을 전개했다.

위 내용도 박진경이 강경한 진압작전을 했다는 부분과 그 대가로 특진했다는 부분이 사실과 맞지 않으며, 3,000여 명의 체포 건도 군사작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다.

1. 박진경은 정상적인 진압작전을 했으며 강경작전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강경한 진압작전을 했다’는 뜻은 작전 기간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박진경은 민간인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일도 없고 학살한 사실도 없다. 박진경은 진압 명령을 받고 한라산 등 산악에 은거 중인 남로당 인민유격대를 찾아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폈으며, 3,800명이란 병력으로 재임 기간 교전으로 남로당 인민유격대 25명을 사살한 것이 전부다.(4·3은 말한다 3권, 419~428쪽)

박진경 작전 시 민간인이 죽었다면 죽은 사람의 성명, 일자, 장소, 작전부대(경찰, 경비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 자료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학살했다고 주장하면 이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이다.

2. 박진경은 강경 진압작전 대가로 특진한 것이 아니라 4개 대대를 지휘함으로써 여단급 부대를 지휘했기 때문에 직위 진급한 것이다.

제11연대장 박진경 중령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개 대대를 동원하여 1차 진압작전을 했고,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2차 작전을 했으며, 6월 1일부터 대령으로 진급했다. 진급명령은 사전에 명령이 나도록 되어 있었다. 연대 작전 개시 3일 만인 6월 1일까지는 별다른 전과도 없었는데 갑자기 작전의 댓가로 특진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박진경은 5월 6일부로 제9연대장에 취임했는데, 제9연대는 창설 중이어서 1개 대대뿐이었다. 그런데 5월 1일부로 수원에서 갓 창설된 제11연대(3개 대대)가 연대장도 없이 5월 6일에 제주도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부대도 통제하게 됨으로써 박진경은 연대본부를 제주읍에 두고 4개 대대를 지휘하였다. 박진경은 5월 15일부로 제11연대장이 되고 제9연대를 합편 받음으로써 편성부대로 4개 대대를 지휘하게 된다. 박진경은 여단(4~6개 대대)

급 부대장이 됨으로써 진급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명령권을 갖고 있는 미군정장관 딘 소장이 박진경을 6월 1일자로 직위 진급을 시킨 것이다.

3. 미군 보고서에 ‘3,000여 명이 체포됐다’고 하여 박진경이 강경진압을 한 것처럼 하였다. 그런데 3,000명 체포는 경찰과 경비대의 합동 작전의 결과이며, 대유격작전에서는 주민들을 연행하여 조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다.

박진경은 산악지역에 활동하는 남로당 인민유격대를 진압하는 대유격작전을 수행했다. 대유격작전에서는 주민과 인민유격대를 우선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산간 주민이나 산중에 은신하고 있는 주민들을 연행하여 조사함으로써 인민유격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민유격대와 내통하거나 협조하는 등의 문제점이 없으면 석방하였다. 6월 15일 제주도 방문자는 체포된 3,000명 중 4개 심문팀에 의해 575명이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미육군사령부 정치고문 조셉 제이콥스, 제주도 소동, 1948. 7. 2.) 체포된 3,000명은 5월 30일 작전개시 후부터 6월 15일까지 경찰(일주도로에서 내륙으로 4km까지의 해안지역 담당)과 경비대가 연행한 총 숫자이다.

제주도 방문자의 보고는 그동안 4개의 심문팀(1개 심문팀에는 군인 1명, 경찰 1명, 미군 1명 등 3명으로 편성)이 조사를 해서 작전이 끝나기 전인 6월 15일에는 80% 이상인 2,425명이 석방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주민 3,000명을 체포했다고 해서 강경작전을 했다고 박진경 대령을 비난하는 것은 전 반적인 대유격작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강경 작전을 떠던 박진경은 결국 6월 18일 부하인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에게 암살됐다.

위 글에는 암살의 배후와 암살자 일당의 사상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문상길과 손선호 등 2명을 자의에 따라 행동을 한 의인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1. 박진경 대령 암살의 배후는 남로당 중앙당이다. 남로당 중앙당은 박진경이 5월 6일 제주도의 제9연대장에 부임한 사실을 알아내고 당일로 특별한 임무를 주어 울구(지도원)를 제주도로 파견하였는데, 울구는 열차와 선박을 이용하느라 다음 날인 5월 7일 제주도에 당도하였고, 3일 후인 5월 10일에는 울구의 주선으로 남로당 제주도당 대표 2명 즉, 군책 김달삼, 조직책 김양근과 경비대 프락치 대표 2명 즉, 11연대 1대대장 오일균 소령, 9연대 정보관 이윤락 중위(오일균 소령을 수행한 대대부관 나희필 소위는 프락치가 아님. 그는 2성 장군으로 사단장, 국정원 차장, 육대총장 등을 역임)가 회담을 하였다. 이 회담에서 정보교환, 경비대 집단탈영 추진, 박진경 연대장 등 악질 반동 숙청 등을 결정하였다.(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78~80쪽)

오일균 소령은 5월 19일경 사상문제로 대대장직에서 해임되었고, 병력을 갖고 있는 문

상길 중위가 암살임무를 맡았으며, 문상길 중위는 남로당 프락치인 사병 8명을 규합하여 6월 18일 새벽에 연대장을 암살하였다.

따라서 박진경은 강경작전을 했기 때문에 암살된 것이 아니라 남로당 중앙당 올구가 개입된 회의에서 숙청을 결정하였으므로 암살의 배후는 남로당 중앙당으로 보아야 한다.

2. 암살자 일당은 문상길 중위를 중심으로 손선호 하사, 배정용 하사, 양희천 이등상사, 이정우 하사, 신상우 하사, 강승규 하사, 황주복 하사, 김정도 하사 등 모두 9명이었다. 이들은 엄호를 하거나 손전등을 비추어 주었고, 손선호가 M-1 소총을 발사하여 연대장을 암살하였다. 이정우 하사는 체포를 피하여 총기를 휴대하고 입산하여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합류하였고 남은 자들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의법 처리되었는데,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는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되었다.

따라서 암살범들은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2명이 아니라 문상길 중위 등 9명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손선호는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명령”이 암살 동기라면서 “박진경이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했다”고 말했다.

위 내용은 사형선고를 앞둔 암살범의 검증되지 않은, 자기 합리화를 강변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1. 박진경은 진압작전 시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대하여 공격명령을 내렸지 30만 제주도민에 대하여 공격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다. 박진경은 1단계로 선무공작을 하여 인민유격대가 산에서 내려오도록 종용한 후 2단계로 병력을 투입하는 작전을 하였는데, 제주도민을 향하여 공격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형수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이다,

제9연대는 제주도에서 모병을 해서 창설되었으므로 부대원 대부분이 제주도 출신이다. 이런 병사들에게 지휘관이 병사들의 가족인 제주도민 30만 명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는가? 설령 공격명령을 내린들 병사들이 이를 따를 것인가?

당시 경비대 연대급 부대에는 미군 고문관이 배치되어 있어서 연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는데, 제11연대 고문관은 리치 대위(9연대 시는 드르스 대위)였다. 만약 박진경 부대가 민간인을 학살하였다면 이런 상황을 미 고문관이 모를리 없다. 상부에 보고된 자료에도 그러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소대장으로 작전에 참여했던 채명신 장군은 “박진경 연대장은 선무공작으로 주민들을 입산 무장대로부터 분리시키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유격전에서 유격대와 주민은 물과 물고기 관계입니다....박진경 대령은 양민을 학살한게 아니라 죽음에서 구출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2001. 4. 17. 증언록)

그리고 작전사령관 브라운 대령은 6월 2일의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작전목적은 “백성들이 산중으로부터 내려와서 안전하게 하곡을 수확하고 새 곡식을 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20명가량으로 보이는 산중의 두령들을 체포하는데 있다...”(현대일보, 1948. 6. 3.)고 말하였다.

당시 산중에는 산간 주민 외에도 5·10선거 투표방해 목적으로 남로당에 의해 강제 입산되었다가 선거 후에도 산중에 잔류한 주민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경찰과 불편한 관계로 하산을 늦춘 자들도 있었다.

사령관인 브라운 대령이 산중의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하산시키는데 작전의 중점을 두었으므로 경비대 지휘관인 박진경 대령은 당연히 사령관의 작전 방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한 하산에 작전의 중점을 두었다. ‘30만 제주도민 공격설’은 완전히 허위 주장이다.

2. 연대장을 직접 총격한 11연대 1대대 의무병인 손선호 하사가 연대장이 15세가량의 어린이를 살해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이는 장교나 주변에 있는 여러 병사들도 보았을 것이다.

문상길 중위나 다른 범인들은 ‘연대장이 어린이를 살해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손선호 혼자만의 주장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음해성 허위 주장이다.

손선호는 법정에서 김익렬 연대장 시절의 사건인 5월 1일의 오라리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박진경 연대장 시절의 사건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로 보아 사형선고가 예상되는 최후 법정 진술에서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박진경 연대장을 나쁜 지휘관이라고 말하려고 논리에 맞지도 않는 말을 한 것이다.

이런 암살범의 헛소리를 아무 검증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추도비 안내판에 넣은 것은 박진경 대령을 고의적으로 매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증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명백히 왜곡된 내용은 즉시 삭제하거나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최소한 객관적 사료에 기초한 정정 안내문으로 교체되어야 할 것이다.

박진경의 작전참모 임부택 대위도 “박진경 연대장이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자는 총살하라고 명령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위 내용은 임부택 대위가 한 말이 아니라 범인들(손선호 지칭)이 한 말이다. 그런데 이를 임부택 대위가 한 말이라고 신문 보도 내용을 날조하였다. 이는 역사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신문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양(암살범의 변호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소감을 말하였다면서 법정에서의 진행 내용을 보도하였다. ”임부택 대위의 진술을 보면 박대령 부임 전 평화복구를 목적으로 선무하여 그들과 다정하여진 피고들은 ① 조선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

도 좋다. ② 양민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이상 명령에 불응자는 총살하라.는 등 타국과의 전쟁을 연상케 한 박대령의 명령에 피고들은 불응하였으며.....후략. (한성신문, 1948. 8. 19.)

보도 내용을 보면 문제의 발언은 피고들의 발언을 임부택 대위가 언급한 것이며, 범인들의 발언에 대한 임부택 대위의 반응은 보도되지 않았다. 그런데 위 내용 중에서 주어진 ‘피고들은’이란 네 글자를 빼 버리고 이를 임부택 대위의 진술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실로 교묘한 왜곡 기술이다.

이렇게 신문 내용을 왜곡한 것은 박진경의 작전참모인 임부택 대위도 손선호 하사의 주장인 ‘제주도민 30만 명 학살 명령 설’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함으로써 손선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의도적 사실 왜곡행위이다. 이런 역사 왜곡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2003년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위 내용은 손선호의 발언이나 임부택 관련 건은 정부보고서에 있으므로 사실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편향적 사료 선택, 객관성 부족, 검증 결여로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라는 사실이다.

안내판 내용은 보고서 내용에 있어서 그나마 사실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배척하였다. ‘박진경은 제주도 주민들을 구출하는데 작전의 중점을 두었다’는 채명신 장군의 증언도 정부보고서(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있으므로 채장군의 증언도 안내판에 제시해야 했다. 이는 안내판 작성자가 정부보고서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사용함으로써 안내판이 공정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보고서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왜곡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신뢰성을 결여한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보고서에는 이런 왜곡된 내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정부보고서 채택 시 우파 위원들은 보고서가 중립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좌파의 시각에서 편파적으로 편찬되었음을 항의하면서 정부보고서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우파 위원 전원이 보고서 채택 승인에 서명하지 않고 사퇴한 바가 있다. 따라서 정부보고서는 좌파만의 보고서이지 공정하게 쓰여진 정부보고서라고 할 수 없다. 차제에 현 정부보고서를 폐기하고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한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박진경 대령 추도비 안내판 내용은 무지와 조작·날조·왜곡된 내용들로서 박진경 대령을 폄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더욱이나 공정하고 중립적

이어야 할 국가 기관장인 제주도지사가 좌파 단체장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안내관에 기관명을 명시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이는 제주도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인민공화국의 꿈을 아직도 꾸고 있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조작·날조·왜곡된 박진경 대령 추도비 안내판은 철거함이 마땅하고 안내판에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기관명을 올린 제주도지사(오영훈)는 사퇴하고 호국영령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2025. 12. 26.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고문 나종삼

[첨부 2]

제2연대장 함병선 기념시설 기능이 통행시설로 전환되었다!

공적비 이설 과정에서 기존 제단 구조가 지하로 매설되고, 그 상부 공간이 일반 보행 공간으로 사용됨에 따라, 기념시설이 갖는 상징성과 존엄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기념시설의 본래 취지 및 이용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공적비 이설 전	공적비 이설 후
----------	----------



- 독립된 제단 구조
- 참배 공간 명확



- 제단 지하 매설 : 높이 변화
- 공간 경계 : 상부 보행 공간화
- 기능(이용 방식) 변화 : 제단 vs 통행로

1. “왜 제단을 지하에 매설했습니까?”
2. “보행 공간으로 설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추모 기능 유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4. “유족 의견을 들었습니까?”
5. “원상복구 가능합니까?”